

# 경북교육노조 질의에 대한 이영우 후보 답변

I

## 공무원 노사관계

### 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노조에 대한 관점과 향후 경북교육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노조는 법령 안에서 조직 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노조원과의 관계 또한 현행과 같이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관계가 유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2. 경북교육노조와 교육감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행정조직 문화개선 사업의 혁신 로드맵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등 경북교육노조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경북교육노조와의 소통이 행정조직 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서 정기 노사협의회 및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II

##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로조건 개선

### 1. 현재 각급 학교 행정실은 새로운 행정업무 가중에 따른 업무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에 업무량이 60%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마땅히 교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마저도 행정실로 이관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공무원 인력은 전혀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발령 근거도 없이 유치원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급 학교 행정실 및 유치원에 인력 충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학교의 업무는 직렬 및 직급에 의해 정해지나, 학교장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업무 개선을 위한 T/F팀을 조직해서 업무 분석, 업무분장에 따른 문제점 추출, 업무 분장 개선 방안 검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 행정직원의 출산 및 휴직, 개인 사유로 인한 연가사용(지방운전원 외 특수 직렬) 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임에도 대체인력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에 따른 그 책임과 부담을 지방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는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대체 인력(예산) 확보, 권역별 인력 pool제 운영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은 있으나, 지역 여건상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귀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3. 경북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 6급까지는 승진하고 퇴직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직급 간 비율을 피라미드형 구조가 아닌 소위 항아리형으로 조정해 승진 적체를 해소해 달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직급 조정은 직급간 비율 한도 내에서 매년 상향 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감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보건직, 공업직, 시설관리직, 운전직, 조리직 등의 많은 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승진을 하는 경우 직렬별로 승진 소요년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원이 적은 소수 직렬일수록 승진 적체 문제는 심각합니다. 모든 직렬을 획일적으로 승진소요 기간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합니다. 직렬간의 실제 승진 소요 연수는 공무원 개개인의 초초 임용 계급 및 조직 기능의 변화, 직렬간 연령 분포의 차이 등 복잡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5.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재 발굴 등 혁신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떠한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실 계획인지? 합리적이고 공정

한 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인사의 목적은 그 조직의 미션의 달성이이고, 이와 병행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생활 안정에 두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권역별 인사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직원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인사 원칙을 정하여,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원칙으로 하여금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도시 중심의 교직원 인사 구역제 실시, 교직원 인사 개혁을 위한 인사 행정 시스템을 운영 하여 인사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6. 지금까지 교원업무경감 대책은 많이 마련되고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에 비해 열악한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1인 행정직원이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과 충원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방공무원은 고유한 업무가 있고, 그 외 업무는 당해 학교장의 업무 분장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실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업무 개선,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노조의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한축인 지방공무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교원위원을 지방공무원이 포함된 교직원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조의 전의를 기회가 있으면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전의 하겠습니다.

8. 현재 각시도의 교육감 훈령이나 교육규칙으로 행정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행정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교원단체의 반대로 인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실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학교 행정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위하여 주요 보직부서의 예산, 인사 및 공보담당을 공모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의 공모에 이어 주요 보직 부서의 담당을 공모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인사 혁신의 틀 안에서 자체 인사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10.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급별에 따라 9~5급의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급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고려 행정실장을 6급 이상으로 하는데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모든 학교에 6급 이상 행정실장을 임용하려면 6급 이상 공무원을 그 만큼 승진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정원 조정,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 혁신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학교 규모 및 학교의 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지방공무원 정원을 수시로 조정 하겠습니다.

11. 2015년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복지 대책(주거, 어린이집 등)이 무엇인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신도청 이전에 따른 교직원의 복지 대책으로 주거, 어린이집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폐교를 교직원 사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당분간 근거리 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출퇴근 수단을 검토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 후보 이영우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 귀하